

[종합·해설]

국회 상임위, 예산 '무더기' 증액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및 지역의 지원 요청 사업이 무더기로 반영되면서 대부분 부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18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문성, 외교통상, 통일,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위 등 6개.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산만 2조8천6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나머지 상임위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지역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 소관 예산은 원안보다 각각 74억4천200만원과 81억1천만원 증액했다.

6곳서 2조8천600억...青·국회도 74억·81억 늘려

광주 숙원 '가전로봇산업' 육성에 20억 신규 편성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해 117억700만 원에서 동결했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 원 증액했고, 비서동 신축 경비도 50억원 늘렸다. 반면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비는 2억5천만원 감액했다.

농식품부도 농업자금이 차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천21억8천500만원 늘린 것을 비롯해 농업 관련 지원 금액을 대폭 보완해 농식품부 등 총 예산을 9천190억원 증액했다.

통일부 예산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 20억원 등 원안보다 117억여원을 증액

됐으며 외교통상부 예산도 원안보다 133억1천400만원 늘었다.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신규 편성된 광주시 반도체 조명도시 조성(산업융합기술원천기술개발) 10억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광주 태양광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20억원의 예산이 있다. 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캐리어 등 광주지역 가전업체의 숙원이었던 '가전로봇산업' 육성 예산으로 20

억원이 편성됐다.

예결소위를 통과, 20일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한 국토해양부 예산도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 1조4천186억원 증액한 것을 비롯해 정부안보다 1조8천503억 원 늘었다.

물론 이를 상임위가 부처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상임위 의견일 뿐, 꼭 반영된다 볼 수는 없다"며 "당 입장과 지역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 합리적인 정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세 규모 6조·세출 1조 삭감해야"

민주, 중산·서민대책 지원 등 6조3천억 세출 신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감세 규모를 정부안에 비해 6조원 줄이고 세출을 1조원 순삭감 함으로써 적자상 국채발행을 10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심사와 과정을 마련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부수법안을 국회 예결특위 논의에 연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부자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4천억원, 소득세 7천억원 등 정부의 감세계획 중 6조원을 철회토록 할 방침이다.

세출 분야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 ▲법률 제·개정 전재 및 법적 근거 부처 사업 1조6천억원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예산 1조원 등 7조3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목표

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육성사업, 사용내역 미공개예산인 특수활동비,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홍보 및 역사왜곡 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신 ▲서민일자리 창출 지원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 협력 증진 지원 3천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원 등 6조3천억원의 세출을 신설, 세출 분야에서 1조원 순삭감 계획을 세웠다.

최 의원은 "감세 6조원 축소와 세출 순삭 1조원을 통해 현재 17조6천억원을 예상되는 국채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부자감세 일부 철회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소국 연방제 도입 필요"

광주 온 이회창 총재 "지역별 산업화 기초 지원 위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8일 광주를 방문, 강소국 연방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천동 경복궁웨딩홀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 경제권 구상과 관련,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서는 세계 경쟁을 따라갈 수 없고 다극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와 재정, 행정, 사법이 독립된 강소국(强小國)을 5~6개 만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호남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제외되거나 권역별 중요도에 있어서 다른 권

역과 차별되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별로 충분한 특화와 산업화의 기초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강소국 연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부분 위헌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특별교부세가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 (종부세) 세금 체계가 비정상적이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라는 큰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번 기회를 놓는 질문에 이 총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현재 경제팀은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전남도당은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경복궁웨딩홀에서 이회창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선진당 전남도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연득 보훈산업 대표이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동화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날 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이연득(55) 보훈산업 대표이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 종부세 갈등 일단 봉합

과세 기준 6억원 잠정 결론

내대표와 입 정책위장을 당사에 불러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차명진 대변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종부세율, 1주택 장기 보유기간, 과표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잠정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과표 기준은 정부의 방안인 9억원 상향조정 대신 현행과 같이 6억원으로 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위 당정회의 날짜를 20일로 확정하고, 이튿날인 21일 의원총회도 열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